

지속적이고 균형감 있는 대학 개혁을 기대한다

박 찬 석

경북대 총장,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세계의 미래는 바로 세계의 고등교육에 달려 있다고 한다. 21세기 한국의 미래는 현재 한국의 대학을 통하여 예견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대학은 밖으로부터 엄청난 개혁을 요구받고 또 안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현실은 장미빛이 아니다.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조망함에 있어서 한국 대학의 역할을 어느 좌표에 두고 있는가 하는 새 대통령의 인식의 차원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정책은 계속 유

지 발전시켜야 한다. 필자는 교육개혁위원도 아니고 기본 계획을 세우는 데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교육개혁을 실천하는 한 책임자로서 교육개혁의 당위성을 통감해 왔다. IMF의 간섭이 왜 왔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세계적인 경제구조에 적응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선진국의 경제 관행과 국제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고, 그 규범을 넘어선 상태로 기업을 경영하였고, 그 중간에는 정부의 간섭이 경제위기를 자초하였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도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 대학교육은 선진국 수준에서 볼 때 너무나 관행에 맞지 않는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총장은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은행과 기업이 당하는 것과 같은 위기가 대학에 와 있다. 대학 개혁의 과제는 바로 선진국 대학과 경쟁하기 위한 구조조정으로 보아도 좋다. 그러나 교육개혁의 현장은 아직도 요원하고 각론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새 정부는 교육개혁의 기본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의 평가기준은 바꾸어야 한다

대학의 평가는 최근 대학의 모양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기업체를 평가하는데 그 기업에는 기계당 노동자를 몇 명이나 고용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얼마나 주고 있는가, 컴퓨터는 몇 대인가, 언제 산 기계인가, 얼마나 넓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냈는가를 갖고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대학의 평가도 이에 준하여야 한다. 대학의 대차대조표는 투자된 비용에 대하여 얼마나 우수한 인재를 양성했느냐, 얼마나 우수한 논문이 대학에서 나왔느냐,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얼마나 봉사했느냐에 따라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교육 면의 평가도 교육시설에 둘 것이 아니라 교육의 결과인 졸업생의 활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지금의 교육평가는 다르다. 열매를 평가하지 않고 과정을 평가하고 교육시설을 평가하고 있다. 물론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강의를 잘할 수 있고, 강의를 잘하면 더욱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틀릴 수가

있다. 현재 시행되는 대학 평가의 기준에서 시설과 교원의 수가 주 평가 자료가 되고 있으므로, 각 대학은 시설을 확충하는 데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다. 단과대학별로 실험기자재와 교원의 수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유사 단과대학들간의 협동을 끌어내어 교육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의 기초부분을 통합하여 운영하면 더욱 알찬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지역 내의 의학교육도 각 대학의 교수요원과 교육연구 시설을 풀(pool)로 이용하는 등 대학간에 협력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평가요소 때문에 대학은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있고, 또 자원이 부족한 대학간에 협력이 되지 않고 있어서 고등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대학의 자율화는 선택조건이 아니다

국립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대학의 행정조직이 유연성이 없고, 회계과정이 복잡하며, 교육부의 간섭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지원은 많이, 규제는 적게'는 새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다. 그 정신이 고등교육법과 국립대학교 특별회계법에 담겨져야 한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에 자율권을 주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정신이다. 그러나 그 하위법령으로 3월부터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학교 설치령과 시행령의 시안은 이 정신과 사뭇 다르다.

국립학교 설치령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립대학은 국립대학에 준하여 하기 때문에 국립대학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사립대학의 운영 방향이 정하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대학의 자율적인 정신을 살려서 대학의 총장에게 자율권을 주고, 이에 대응하여 총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대학평의회 같은 것을 두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은 늘려야 한다

지금 전국의 모든 대학이 환차손 등으로 인하여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렵다. 우선 해외에서 수입하여야 하는 도서, 실험기자재 및 정보화 장비는 환율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배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학에 대한 국고 지원을 줄이고 있고, 등록금 인상을 자제시키고 있다.

고등교육비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이다. 우리나라가 오늘의 경제 위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고비용 저효율의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선진국의 기술에, 후진국의 노동력에 밀려서 국제경쟁을 할 수 있는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창출이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문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과 연구인력의 90%가 대학에 있다.

대학이 연구인력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산업기술이 창출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 과학기술의 창출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한 국가의 기술의 창출은 그 나라의 GNP의 몇 퍼센트가 연구 개발에 투자되느냐와 정확히 비례한다. 새로운 기술

을 원하는 만큼 투자를 해야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따라서 대학의 연구비를 줄이거나 대학의 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우선 배고프다고 내년에 심을 씨감자를 볶아 먹는 격이 된다.

선진국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3천만 원인 데 비하여,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그것은 4백만 원에 불과하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인적 자원의 개발은 대학에 대한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길밖에 없다. 인적 자원의 개발은 바로 그 나라 고등교육의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인재 지역할당제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정상화하려면 대학입시를 정상화해야 하고,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인재 채용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인재 지역할당제의 위헌 여부가 이야기되고 있지만 인재의 서울 편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보면, 만약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인재할당제는 시행하여야 할 일이다.

지난 30년간 정부의 일관된 국토개발정책은 지역 균형개발 정책이었고, 지방에도 적지 않은 투자를 하였다. 지금 지방에는 아무리 산간벽지라 하더라도 도로가 완비되어 있고, 동전 하나로 장거리 전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학생이 없어서 폐교할 만큼 학교도 많이 세웠다. 대학도 될 만한 곳에는 모두 인가하여 설립하였다. 의료혜택을 받을 만한 병원도 다 되어 있다. 공업단지도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모두 건설하여 두었지만

공장은 들어오지 않고 잡초만 무성히 자란다. 어느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지방의 사회간접자본은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인구는 서울로 떠나고 있다.

교육개방으로 인한 대학교육의 경쟁은 서울 소재 대학의 우수인재 독과점 현상을 가속화하여 왔다. 한편, 지방은 여러 자원이 부족하여 대학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지방낙후 현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인재의 유출이 인구의 유출을 촉진하여 자금의 유출, 지방기업의 낙후, 지가의 하락, 지방민의 자존감 상실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은 독자적인 발전의 방향 축을 찾지 못하고 서울 의존적, 서울 종속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다. 지방민은 서울 모화사상이 만연하여 지방대학을 외면하고 '지방 우수학생 서울 명문대학에 보내기', '지방대학 깎아 내리기', '서울 유학생을 위해 서울에 기숙사 짓기'를 지방유지들이 애항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을 정도이다. 지방 사람이 지방을 혐오하고, 지방의 유지가 지방대학을 더 폄하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의 불균형이 인재의 불균형 배분에 있고, 그 원인은 서울의 교육집중에 있다고 한다면 세계 최고의 교육열, 즉 교육의 변수를 균형 발전의 지렛대로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인재의 서울 집중을 막을 수 없고, 따라서 지방을 회생시킬 수 없다. 인재를 지방에 뿌리내리도록 하여 그 인재로 하여금 지역 발전을 유도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우수한 인재를 지방에서 확보하는 길이다. 인재 지역할당

제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군법무관 시험, 공인회계사·변리사 시험 같이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격시험을 지역의 인구 비례로 지방 출신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그 효과는 지방의 우수학생이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임용 기회가 높아지므로 지방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따라서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생이 서울로 썰물처럼 빠져나가지는 않게 될 것이다. 지방의 학부모도 막대한 학비를 지출해 가면서 서울로 유학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서울의 명문 대학 수준의 대학이 지방에도 여러 개 생기게 되므로 과외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부차적 이점이 있다.

선진국은 수도와 마찬가지로 지방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고,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한 나라는 자존심 있는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형태는 달라도 인재할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쿄 대학의 시게오 총장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최근 전국 고등고시 합격자의 70%를 도쿄 대학 출신자가 차지하고 있지만 50%만 임용하고 나머지는 지방 대학에 할당하고 있다고 한다. ♣

박찬석/경북대 사대 지리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과 네덜란드 사회과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하와이 대학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마산교대 전 임강사,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 동 대학 학생부처장 등을 거쳐 현재 경북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 한국지역학회 및 대한지리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구·경북지역발전학회,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부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